

---

지역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기초자치단체-전문대학 협력기반

#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

---

2022. 3. 23.



산학협력정책관

## 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경과 .....	1
II. 추진방향 .....	4
III. 사업내용 .....	5
IV.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.....	10
V. 사업관리 .....	13
VI. 추진일정(안) .....	19

# I. 추진배경 및 경과

## 1. 추진배경

### □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 등 **지자체와 전문대학 위기 가속**

-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(50.2%, '20년 기준)하며,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총생산(GRDP) 격차 심화\*

\* 수도권-비수도권 지역총생산 격차 : ('10) △1.3%p → ('19) 4.1%p

- 특히, 229개 시·군·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이 절반(47.2%, 108개)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92.6%(100개)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 직면

※ 소멸위험지역: ('17) 85개→('18) 89개→('19) 93개→('20) 105개→('21) 108개(입법조사처, '21.10월)

- 이와 맞물려, 학생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전문대학 증가로 교육의 질 저하\*와 함께 폐교 위기 대학 증가 예상

\* 인건비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전문대학 특성상 등록금 수입 감소가 우수 교원인력 확보 곤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(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 평균 73.7%, 사학진흥재단 발표, '21.1월)

- 전문대학의 질 저하와 폐교는 지역 경제 위축\*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 및 지역 내 다른 전문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연결

\* 정원 5천 명 이상인 대학 폐교 시 4,756억원 산출감소 및 3,142명 고용감소 추정(직능원)

### □ 청년의 눈높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**지역 산업체 인력난 심화**

-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\*되어 있어 지역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규모 확대\*\*

\* 지역별 연 평균임금('20) : (수도권) 3,540만원 / (비수도권) 3,192만원 (연 348만원 차이)

\*\* 청년층(20~30대)의 수도권 순유입(명) : ('16) 4.2만 → ('19) 8.5만 → ('20) 9.3만

-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로 직결

- 5인 이상 사업체의 미충원 인력\*은 8만5,000명 수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(5만9,000명↑)하였으며, 제조업(3만2,000명)이 가장 부족

\*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제한 인원(2021년 상반기 노동력조사 결과, 고용부, '21.6월)

## □ 지역 특화분야 인력 양성 및 인생다모작 신중장년 재취업 미흡

-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시 연고 또는 주력산업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역 특화분야 인력 양성 미스매치 발생

- 비수도권 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인력 투입이 요구\*되나, 청년 유입·정착을 목적으로 만드는 청년공간 등 지역 정주 인프라 만족도\*\*는 낮음

\* 지방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'인력 확보'(대한상공회의소, '22.2월)

\*\* 공간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청년의 정주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침(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, '20.6월)

- 경제활동 재참여를 희망하는 신중년\* 및 신장년이 증가하고 있으나,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은퇴 이후 경력 재설계를 통한 재취업 미흡

\* 조기 은퇴자 및 정년 퇴직자 등 일할 역량은 있으나, 재교육이 부족하고 재취업 처가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(50~64세), 신중년은 평균 72세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희망(통계청, 2020)

※ '15~'18년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19.5만명 중 10.9만명(55.9%) 재취업(일자리위원회, '20.5월)

## □ 전문대학-지자체(지역사회)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체제 구축 필요

- 전문대학은 연계 지역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고,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입학-교육-취업-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 필요

-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(산업체 포함)와 전문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

- 특히, 전문대학이 지역 상생의 주체로서 위치를 정립하고, 소재 지역의 생애 전 주기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시급

❖ 지역소멸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인적·물적 인프라가 집약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 조성

## 2. 주요경과

- 국정과제, '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(52-4)'
- 「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('19.1월)」Ⅲ유형(후진학 선도형\*)
  - \* 평생직업교육 확대, 후학습 기반 내실화, 직업교육거점 기능 강화 등(총 25개교)
- 「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('20.9월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)」
  - ※ 전문대학-지역산업-지자체 간 협력 기반 '직업교육혁신지구' 추진 추후, 지역기반 직업계고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직업계고-전문대-지자체 간 협력 강화
- 「2021년 경제정책방향('20.12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)」
  - ※ 전문대학 중심, 지자체,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·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 마련
- 지자체-전문대 연계기반 직업교육혁신지구 기획연구('20.12.~'21.3.)
- 「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('21.5)」, 「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(안)('21.12)」, 「2022년 교육부 업무 계획('22.1)」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
- 「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」사업 기본계획 시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('21.12~), 전문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·전문가 의견수렴 실시(수시)
  - ※ 229개 사군구 및 전문대학 대상 유튜브 중계 및 간담회 등 온오프 병행 의견수렴('22. 2.16~'22)
-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안전부·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기능 연계 등을 위한 협업과제 확정(~'22.2.28.)

### 《 의견수렴 주요내용 》

#### ■ 지자체

-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부 혼자 힘으로만 대응하기에 어려운 사회 문제에 해당하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협력이 필수
-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산업체도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지원 필요

#### ■ 전문대학

- 나뉘먹기 식의 예산 배분이 아닌 새로운 평생직업교육 모델 발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
- 지역별·대학별 장점,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해야 하므로 컨소시엄 참여가 적절

## Ⅱ. 추진방향



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·물적 자원과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 
활용하도록 지원하여 **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**

현재	미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청년은 눈높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고,</li> <li>신중장년 및 조기·정년퇴직자는 경력 재설계 미흡으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</li> <li>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입지는 점점 좁아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지역청년)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 연고 취업기회 제공으로 <b>지역인재의 정주 활성화</b></li> <li>(신중장년) 재교육 및 경력 재설계 등으로 인생다모작을 위한 <b>신중장년의 잡노마드 활성화</b> * job-nomad :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직업을 개척하는 사람을 지칭</li> <li>(지역주민)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<b>지역주민 만족도 및 전문대학 위상 제고</b></li> </ul>

## Ⅲ. 사업 내용

### 1. 사업 개요

#### □ 사업명 :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(HiVE\* 사업)

\* HiVE(중심지) :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

#### □ 지원내용

-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\*를 선정하고, 이에 맞춰 교육체계를 연계·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 지원

\*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거나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

#### □ 사업단위

-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(전문대학 소재지) 간 컨소시엄을 구성

※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제주권 5개 사업 권역내에 소재한 대학 및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되, 권역 밖 지자체라도 사군구 경계가 대학 소재지 지자체와 인접하고 해당 지역에 전문대학이 없는 경우, 생활권역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

※ 전문대학 최대 3개 이내 참여 가능, 기초자치단체 최대 2개 참여 가능

#### □ 사업 규모 및 기간, 예산

- (사업규모) 총 30개 컨소시엄(전문대학+기초자치단체)
- (사업기간) 2022년 선정 시 ~ 2025년 2월(3년간)
- (지원예산) 컨소시엄 당 총 사업비 연 15억원 내외(국고+지방비)\*

\* 총사업비(국고 405억원, 지방비 45억원 이상), 사업비는 대학으로 교부하여 사업 관리 책무성 부여, 사업관리비 별도

## 2. 사업 주요내용

### ① **[필수]**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

- (거버넌스 구축)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계획,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주요사항\*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‘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’ 구성·운영

\* 지역 산업여건 및 참여대학 특성, 지역사회 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특화분야 선정, 협력체계 구축, 사업 참여 주체 간 의견교환·수렴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

※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(HiVE)-지역협업위원회(RIS) 연계로 기초-광역단위 간 협력 강화 등

- ☞ (RIS 연계) ‘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(RIS)’을 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 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RIS사업의 핵심 분야 외 특화분야를 선정하거나, RIS 사업의 핵심 분야와 연계한 하위 단위 인력양성 계획 수립  
(ex. 반도체 공정 중 RIS사업은 R&BD 인력 양성, HiVE사업은 생산 공정 인력 양성)
- ☞ (직업교육혁신지구 연계) 직업교육혁신지구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구역 안에 있는 컨소시엄의 경우, 직업교육혁신지구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등 산업체 취업 후 졸업생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학습을 위해 심화후학습 교육과정 연계  
(ex. 직업계고 A학과 졸업-지역 내 산업체 취업-전문대학 A학과 직무심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)

- 위원은 전문대학 총장, 기초자치단체의 장, 교육지원청 교육장,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, 지역기업 대표 등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와 고등직업교육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

※ 위원장은 전문대학 총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수행,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

### ② **[필수]** 지역특화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양성<sub>학위 과정</sub>

- (지역특화분야 선정)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,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분야 선정
- (특화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편) 지역특화분야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을 토대로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정주 인재 양성



- 전문대학 내 학과를 기초자치단체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맞춤 학과로 개편하고, 학과운영 및 정규교육과정 설계 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향 지속 모색

※ [산자부, 행안부] 직업계고-전문대학-지역 내 산업체 취업을 연계하고, 취업과 정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업체 협력 및 주거 지원, 교통편의 등 정주 인프라 지원

### 3 [필수]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비학위 과정

- (특화분야 연계 직업교육) 지역특화 학과와 연계한 직업교육심화 과정으로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,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\* 지역 상황에 필요한 인재양성 기능 수행

※ [산자부] 산업체 내 자체 연수원이 없는 지역 내 중소·중견 산업체가 재직자 재교육, 인턴십 등을 HIVE사업 참여 전문대학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역 내 계속교육 활성화

- (일반분야 직업교육)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·공급 분석을 토대로 전문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온·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

- 전문대학 내 관련학과, 지역 내 교육수요, 구직수요 등\*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전직교육, 자격증 취득, 창업교육 등 단기 교육과정 운영

\* 기초자치단체 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 공급현황분석, 자영업자·재직자·소상공인 등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분석 및 RPL활용 등

※ (예시) 美 캔터키 커뮤니티 칼리지, 지역 내 소외계층 직업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지역 산업계 수요 반영 교육과정 운영(자격증 취득 등)을 통해 취업역량 제고

※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'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표유형'에서 운영한 직업교육거점센터 연계 기능

### 4 [자율]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 지역사회 공헌

- (지역문제 해결)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사항을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행

※ (사례) △지역-대학 상생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 △대학 주변시설 주민 이용증가에 따른 환경 개선 △지자체 지역인구 감소와 재정난 관련 문제점 극복방안 공동 마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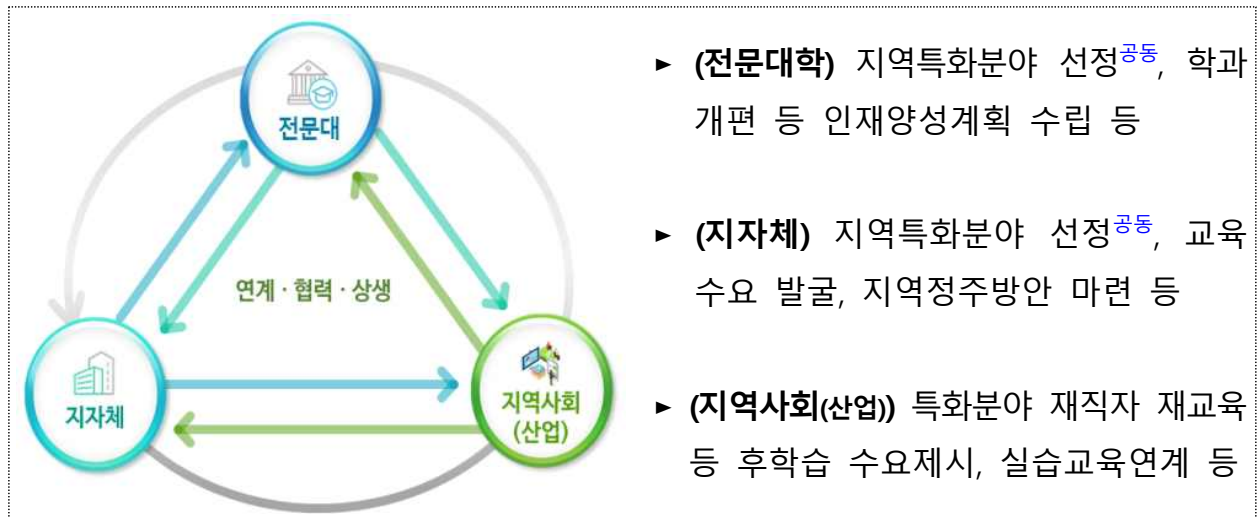
- (지역공헌 등 역할 강화) 전문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요양·복지시설 위탁 운영, 대학 내 시설 주민 개방 등 지역사회 내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
  - 지역 내 접근성이 높은 대학 일부 시설을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\*으로 공유·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
- \*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개 중 30.6%(70개)는 지자체 운영 평생학습관 부재
- (그 밖에 타 사업과 연계) 타 사업과 중복·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타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체계 구축
- ※ 타 재정지원사업과는 중복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, 연계·협력을 중점으로 추진

### 3. 사업운영 체계

#### □ 사업전담조직 설치

- (총괄·전담부서 구성)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산하에 전담부서 (가칭 'HiVE센터\*')를 구성하고 사업총괄 운영,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인재양성계획 수립, 사업비관리 등 전담
- \* HiVE센터는 주관대학 대학본부에 설치하며, 센터장은 대학본부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·교무처장 등 보직자가 겸직 가능하고 사업전담인력 신규 채용 필수, 전문대학-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내실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에서 동 센터에 관계관을 파견하여 협업 가능
- ※ 사업의 중복성 배제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집행시 대학혁신위원회와 협의

## □ 참여주체별 역할



- **(전문대학) 교육체계**(학과·정원 분포, 교육과정) 등을 고려하여 **특화분야와의 연계성**(인력수급 불일치 등)을 분석하고 대학의 발전계획·특성화전략 등과 부합하도록 사업 방향 설정
  - 지역특화분야 관련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논의를 거쳐 전문대학 교육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시행

※ 동일 특화분야 내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할 세부분야를 정하고, 해당 분야 육성을 위한 학사구조·교육과정 개편 등 추진
- **(기초자치단체) 지역특화분야**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수요를 조사·분석하고,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지역 산업과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, 지역사회 공헌 과제 발굴 등
  - 지역특화분야와 동 거점지구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과 재학생 및 재직자 등에 대한 지역 정주 지원방안 마련
  -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행·재정적 지원
- **(산업체 등 지역사회) 직업교육 프로그램** 자문 및 멘토링, 학생 현장 실습 기회 제공, 교육 이수자 일자리 제공, 현장 애로사항 발굴 등

## IV. 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

### 1. 사업 신청

#### □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

- (신청대상)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간 컨소시엄
  - (전문대학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\*
  - \*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미참여대학, 2022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을 제한하고 사업 선정 이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, 재정지원가능 대학에 포함되는 시점까지 국고 사업비 지원 불가(대학 자체 예산으로 사업 수행)
  - (기초자치단체)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226개 시·군·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제주시, 서귀포시,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총 229개
- (신청방법) ‘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’를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전문대학 총장이 ① 사업 예비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, ② 사업추진을 위한 ‘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계획서’를 제출
  - \* 전문대학-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당 1개의 사업계획서 제출하며 사업 참여 컨소시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비신청서 제출 컨소시엄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

#### □ 사업계획서 작성방법

- (사업예산) 총사업비(국비 90%+지방비 10%이상) 15억원 이상으로 신청하며, 반드시 10% 이상의 기초지자체 대응투자 확보(현물 미포함)
  - ※ 2개 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, 기초자치단체별 대응투자 합산 금액이 총 사업비의 10% 이상이어야 함(참여 지자체별 매칭 비율은 자율)
- (작성내용) 사업추진방향, 사업추진체계, 사업추진내용, 재정투자계획,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며, HiVE센터의 3개년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작성
- (유의사항) 중앙부처·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지원 사업\*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
  - \* RIS, 직업교육 혁신지구, LINC 3.0,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, 마이스터대 LIFE 사업 등

## 2. 선정 절차

### □ 선정개요

- (기본방향)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도출한 지역 내 특화분야 및 우선순위 현안 해결사항과 연계한,
  - 전문대학의 학위·비학위 교육과정 개편,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 직업교육과정,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등 지역의 고등직업교육 혁신 역량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
  - 권역별 선정 규모 안배를 추진하되, 권역별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
- ※ (진입가능 최저점제)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불가
- (사업권역 및 선정규모) 총 30개 컨소시엄 이내(권역별 6개 컨소시엄 내외)

수도권	충청·강원권	대구·경북권	부산·울산·경남권	호남·제주권
6개 이내	6개 내외	6개 내외	6개 내외	6개 내외

※ 권역단위 선정규모 미달 시 전국단위로 추가 선정하되, 수도권 선정규모는 최대 6개로 한정, 권역 외 기초자치단체 포함 컨소시엄의 사업권역은 주관 전문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

- (선정방법) 선정평가단이 서면·발표(면접)평가 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(사업비)를 확정
  - (서면평가)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1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
  - (발표·면접평가)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, 기초자치단체의 협력 의지 등을 발표하고 면접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

### □ 평가단 구성·운영

- 지역발전 전문가, 고등직업교육 전문가, 산업계, 연구계 인사 등 관련 분야별 대표성을 갖춘 선정평가단 구성
  - ※ 사업의 신청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위탁기관이 평가패널, 평가위원 수를 확정하며,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업 부처(행안부, 산자부)의 전문가 풀을 활용할 수 있음

- 선정평가단 구성 시 소속 기관 소재지 등 상피 요건을 고려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

## □ 부정·비리대학 수혜 제한

- 교육부 「재정지원사업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」에 따라 대학의 부정·비리 사항은 선정평가에 반영(처분시 기준, 2021.1.1.~2022.3월 총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한 부정·비리까지)

\* 입사학사비리는 '2020.1.1.~2022.3월 총괄심의위원회 심의·통보'까지의 부정·비리사항을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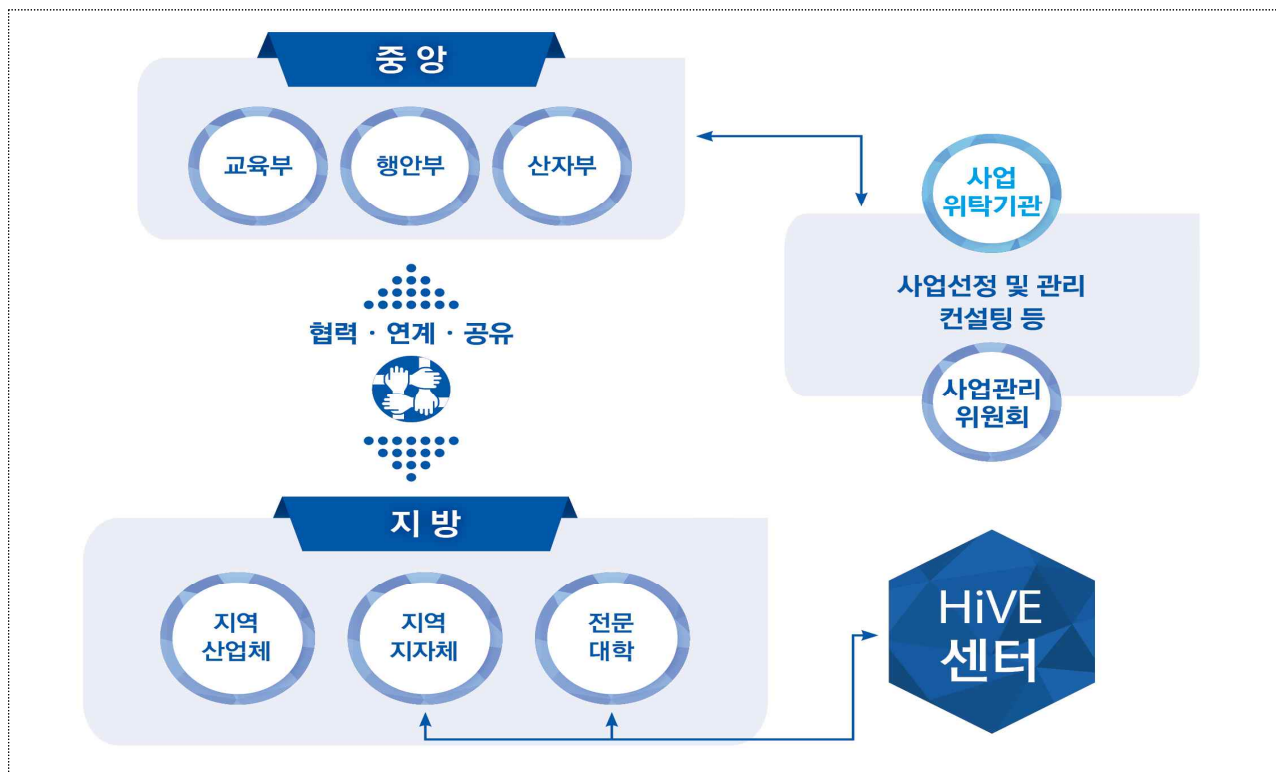
## □ 평가항목

영역		항목	배점
1. 사업 추진방향 (15)		1-1.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	5
		1-2. 특화분야 선정의 적절성	10
2. 사업 추진체계 (20)		2-1. 거버넌스 구성·운영계획의 적절성	10
		2-2. 협업 기초자치단체의 의지	10
3. 사업 추진내용 (45)	특화분야 교육과정 (15)	3-1. 특화분야 학과 운영체제 구축의 적절성	5
		3-2. 특화분야 교육과정 계획의 우수성	10
	평생직업교육 고도화 (15)	3-3. 특화분야 연계 직업교육 계획의 우수성	10
		3-4. 일반분야 직업교육 계획의 우수성	5
	지역현안 연계 자율과제 (15)	3-5. 지역 맞춤형 과제 설정의 적절성	5
		3-6. 지역 맞춤형 과제 실행계획의 우수성	10
4. 재정투자계획 (10)		4-1.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	5
		4-2.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	5
5. 성과관리계획 (10)		5-1. 사업성과 관리방안의 적절성	5
		5-2. 성과 공유·확산의 적절성	5
합 계			100

## V. 사업관리

### 1. 운영 관리

#### □ 운영 관리 체계도



#### □ 운영 관리 주체별 역할

##### < 중앙 >

- 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총괄
- (행정안전부)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추진 관련 기초자치단체 제도 개선 및 중앙-지방 간 추진 사업의 연계 검토 등
  -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\*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 유도

\*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연간 1조원, 총 10년간 10조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기금(행정안전부 기획,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집행)



- (산업통상자원부) 기초자치단체 내 지역특화분야 선정을 위해 참여 컨소시엄 지역 내 산업 관련 정보 제공 등
  - 사업 선정 이후,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사업\* 과 HiVE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 연계, 지역 내 산업체 지원방안 모색 등
- \* 근로자, 기업, 지역주민, 지자체가 다 같이 근로조건, 사업계획, 복지 여건 등에 대해서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신규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

### < 사업위탁기관 >

- (사업위탁기관) 사업 관리·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
  -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,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, 컨소시엄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,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 수행
  - ※ 사업위탁기관이 컨설팅 위원 등을 위촉하며,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업 부처(행안부, 산자부)의 전문가 풀을 활용할 수 있음
- (사업관리위원회) 사업관리·운영에 관한 자문,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, 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

### □ 운영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

- (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협약) 전문대학, 기초자치단체가 「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협약」을 체결하여 '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' 구성
  - (협약내용) 위원회의 목적, 구성원 간 협력과 역할 등 포함
  - (참여협약) 복수의 대학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주관대학 및 주관 기초자치단체는 참여대학의 장 및 참여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「참여협약」을 체결하며 주요 의무사항,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
- (사업협약)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위탁기관과 「HiVE 사업 협약」 체결
  -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대학의 장,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위탁기관의 장이 연명 날인
  - 사업계획의 주요내용,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, 주요 의무사항, 불이행 시 조치사항, 사업비 교부·관리 등 포함



## 2. 예산 관리

### □ 사업비 교부

- 총사업비는 국고 90%, 지방비\* 10% 이상 으로 구성

※ 선정 이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장의 추경예산 확보 약속서 첨부

- 국고는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주관대학에 교부하며, 지방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주관대학에 교부하되, 국고 교부 후 4주 이내 회계 간 전출(단, 사업 1차년도에 한하여 회계 간 전출 기간을 해당연도 사업기간 내로 조정)

### □ 사업비 편성 및 집행

- 총사업비는 '주관대학'이 총괄관리 하며, 대학은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

※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 여부는 주관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, 총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참여대학에 별도 교부 없이 주관대학에서 집행·정산

- 사업비는 교육부 및 사업위탁기관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편성·집행하되, 사업계획·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
- 사업수행 컨소시엄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,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자체 재원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
-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투자가 불가하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 내 점검체계 구축

### □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

- ①사업목적 외 예산사용, ②법령위반, ③입시비리, ④횡령 등 대학의 부정·비리가 확인된 경우, 지원금 삭감·회수 등 재정 제재 조치

- ‘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’에 따라 법령 위반\*, 입시·학사·회계비리 등 부정·비리 사안 등에 대한 사업비 관리·조정
  - 대학의 부정·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[붙임 1]의 수혜제한 규정 적용
  - ※ 대학의 부정·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
-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
- 공사, 용역 및 물품의 제조·구매 계약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원칙으로 사업비 절감 및 국고지원금 집행 투명성 확보

## □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

- 사업비는 ‘23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 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(이월범위 추후 안내)
  - ※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
-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(사업비 집행 내역 포함) 제출
  - 사업 참여 컨소시엄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
- 국고 집행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사업위탁기관은 사업비 집행 실태 점검 실시
- 목표 달성수준 및 성과미달 여부 등을 연차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비 조정 및 지원 가능

### 3. 성과 관리

#### □ 성과평가

- (평가 개요)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계획의 이행 실적, 사업 관리 및 운영 등을 종합 고려하여, 각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
  - (자체평가위원회 운영)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(외부위원 포함)
  - (연차 및 종합평가) 각 사업연도 집행 후의 성과지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환류
    - (연차 평가) 컨소시엄별 제출한 HiVE 사업 실적보고서 평가\* 후, 성과미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 실시
- \* 성과지표 달성 현황,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 운영결과, 향후 추진계획 등 평가
- (종합평가) HiVE 사업 종료시점에 그 간의 사업추진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

#### □ 성과 지표

- 성과지표를 연간성과지표, 종합성과지표로 구분\*
    - 지표특성에 따라 성과지표별 평가주기는 차별화하되, 평가와 관계없이 각 성과지표 관리는 매년 실시
- \* 연간성과지표(매년 점검 및 평가), 종합성과지표(총 사업기간 종료시 평가)
- 연차평가 : 연간성과지표 대상 평가
  - 종합평가 : 연차평가 + 종합성과지표 평가

## 성과지표

### 1) 필수성과 공통지표(컨소시엄 전체실적)

영역	핵심성과지표
① 거버넌스 구축·운영	▶ 거버넌스 구축·운영·협업 성과 <span style="color: blue;">정량</span>
② 특화분야 정규교육과정	▶ 교육과정 개발· 운영 성과 <span style="color: blue;">정량</span> ▶ 특화분야 개편학과 충원율 <span style="color: blue;">정량(2,3차년도)</span>
③ 평생직업교육 고도화	▶ 직업교육심화과정 이수 실적 <span style="color: blue;">정량</span>
④ 지역사회공헌	▶ 고등직업거점지구사업 수혜자 만족도 <span style="color: blue;">정량</span>
⑤ 지역 정주여건 개선	▶ 청년 정주여건 향상률 <span style="color: blue;">정량</span>

### 2) 자율 성과지표(예시) : 컨소시엄에 특화된 사업 비전과 사업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설정(5개 이내)

- ▶ 특화분야 연계 개편학과의 혁신적 교육방법(PBL, 플립드러닝 등) 운영 성과
- ▶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대학 시설·자원 공유실적
- ▶ 직업심화교육과정 연계 지역주민 창업실적
- ▶ 지역 소상공인, 산업체 대상 애로기술(컨설팅) 지원
- ▶ 직업계고 재학생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

## □ 컨설팅단 구성 · 운영

- (구성) 지역발전 전문가, 고등직업교육 전문가, 산업계, 연구계 인사 등 관련 분야별로 대표성이 갖춰지도록 컨설팅단 구성
- (운영) 사업 시행 전 컨설팅과 사업 중 맞춤형 컨설팅 운영
  - (보완 컨설팅)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,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재정투자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, 시행 전 재점검하여 수정·보완사항을 자문·권고
  - (맞춤형 컨설팅)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해소를 위해 정기·수시(컨소시엄별 수요 발생시) 맞춤형 컨설팅 지원

- (결과 활용) 컨설팅단의 수정·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컨설팅 결과 및 반영여부를 성과평가에 포함
  - 타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결과에 따른 수정·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, 계획 수정 시까지 지원금 교부 시기 조정 등 가능

## □ 우수모델 발굴 및 성과 공유·확산

- (사업계획 및 평가결과 공개) 사업계획 및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컨소시엄 홈페이지와 사업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
- (우수성과 공유) 우수성과를 모든 전문대학 및 기초자치단체가 알 수 있도록 공유·확산 추진\*

\* 사업성과보고회, 워크숍, 성과포럼 개최, 우수사례 책자 제작·배포 등

- (대국민 홍보) 전문대학-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대국민에게 적극 홍보\*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

\* 전광판 국가광고(민간 37여기, 공공 80여기) 활용, 문체부 협조

## VI. 추진일정(안)

- 사회관계장관회의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 : '22. 3. 23.(수)
-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제출 : '22. 5월 2주
- 선정평가 실시 및 선정결과 확정 : '22. 5월 4주 ~ 6월 3주
-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: '22. 6월 4주 ~ 5주
- 컨소시엄별 성과평가 실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: '23. 3월